

[뉴스]
부산 VS 전북
국회發 금융중심지 쟁탈전
産銀·수은 이전 김칫국
02

제4158호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코스피 2148.41 (-8.77)	코스닥 754.89 (+0.13)
금리 1.80 (-0.02)	환율 1132.60 (+2.80) (13일)

일자리 세대갈등… 60대 40만명 ↑ 30·40대 24만명 ↓



文 대통령, 말레이시아 공식환영식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쿠알라룸푸르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암둘라 국왕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뉴스

규제 또 규제… 재건축시장 올스톱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정부의 '규제 역풍'을 맞아 신음하고 있다. 지난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조과이익환수제(재조환) 도입에 이어 올해는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전 과정에 개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올스톱 위기에 몰렸다.

13일 부동산 업계에선 서울시가 전날 발표한 '도시·건축 혁신안'에 따른 재건축 시장의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혁신안은 민간이 재건축·재개발 밀그림을 그리기 전에 서울시가 먼저 총수·디자인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 市 중복규제?…더 어려워지는 재건축

민간의 정비계획 수립 전에 '사전 공공기획' 단계를 만들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가 용적률, 높이, 경관, 지형, 기구 구조 변화 등을 종합 검토해 단지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주요 골자다. 서울시가 정비 사업 시작부터 관여하겠다는 뜻이다. 혁신안은 내달 4개 아파트 단지에 시범 실시하고 하반기에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혁신안으로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건축 디자인의 다양화를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비계획안 수립에 가이드라인 이 반영되면 정비계획 결정이 이뤄지는 심의 단계 도계위 개최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소요 기간을 20개 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통상 '성냥갑'으로 비유되는 획일적인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현상



서울지역 한 재건축 아파트. /채신화 기자

서울시 정비사업 전 과정 개입
재건축 사업 속도 지연 불보듯
위축 된 재건축시장 침체 우려
온마·잠실주공 등 시세 출렁

설계공모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서울시의 혁신안이 '또 다른 규제'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재건축에서 발생한 초과 이익의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재초환이 시행되고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미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정비사업 가이드라인까지도 입되면 재건축 사업이 더 속도를 내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도시·건축 혁신안은 엄청난 규제"라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재건축 인·허가를 안 해준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되면 재건축이 시급한 지역도 포기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진다"라며 "그 영향으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장기화되거나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미 집값 '뚝'…

서울시의 혁신안이 본격 도입되면 이미 위축된 재건축 시장도 더 침체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18주 연속 내리막길이다. 지난 2012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 지난해 11월 2일부터 지난 8일까지 서울 재건축 매매가격의 누적 변동률은 -2.4%다.

정부 규제가 다주택자·고가 아파트 소유자를 겨냥하자 투자 성격이 강한 재건축 아파트 매수세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재조환,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의 규제가 이어지고 내달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도 앞두고 있어 주택 보유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강남권 아파트 시세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의 가격도 출렁이고 있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 84m²가 지난달 16억6000만~16억9000만원(5~8층)에 팔렸다. 지난해 9월 최고가 20억5000만원 대비 4억 원 가량 떨어진 수준이다.

잠실주공 5단지는 지난 1월 전용 76m²가 17억원(5층)에 팔렸다. 지난 9월과 거래된 최고가와 19억 1000만원(5~14층)에 비하면 2억 원 넘게 내렸다. 최근엔 같은 주택 형이 16억원 선에서 호가가 형성돼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기준에도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혁신안 도입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한 요소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통계청 '2월 고용동향'

취업자 26만3000명 늘어

13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노인 일자리사업에 취업 ↑
청년 체감실업률은 최악

지난달 취업자가 26만여명 늘어나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사업 영향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대폭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꾹하는 제조업이나 금융 및 보험업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고 30·40대 취업자도 크게 감소했다. 일자리도 세대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주장이 나온다.

통계청이 13일 공개한 '2019년 2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달 취업자는 2634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3000명 늘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 1월의 33만4000명 이래 13개월 만에 최대다.

정부는 동절기 노인소득 보전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 조기 집행, 비교 대상인 2018년 2월 고용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쳐 지표가 개선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취업자를 산업·연령별로 구분해보면 60세 이상(39만 7000명 증가)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3만 7000명)에서 역대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제조업(-15만 1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명), 금융보험업(-3만 8000명)의 취업자는 크게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도 3000명 줄었다.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1만 5000명, 12만 8000명 감소했다. 실업자는 130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8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4.7%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화장실업률)은 13.4%로 작년 2월보다 0.7%포인트 올랐다.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4.4%로 1.6%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보조지표3은 조사대상 전체와 청년층 양쪽 모두 2015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올해 2월에 가장 높았다.

고용률은 59.4%로 0.2%p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8%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공공 일자리사업 등 취약 계층이 받는 충격을 줄이는 정부 노력을 의미 있게 평가해 되 경기를 부양하거나 민간이 적극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긍정적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이 같은 2월 고용지표에 대해 취업자 증가가 현저한 분야와 연령대에 비춰볼 때 정부 일자리사업이 고용시장을 지탱한 것일 뿐, 주력 산업은 채용을 꺼리는 추세에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 취업이 활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30대 취업자는 17개월 연속, 40대는 40개월 연속 전년동월보다 줄었다.

성태운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늘어난 취업자 가운데 10만명 정도는 재정 투입에 따른 추가 취업자로 추정된다"며 "예전에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명 정도였다고 보면 재정 영향을 제외한 취업자는 여전히 3분의 1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시장에 나온 이들이 느끼는 고용 상황이 개선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통계 작성 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일자리사업 등 취약 계층이 받는 충격을 줄이는 정부 노력을 의미 있게 평가해 되 경기를 부양하거나 민간이 적극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긍정적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김상조, 재벌관 달라졌다?

세르비아서 기조강연

"재벌은 소중한 자산
독점적 지위가 문제"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 위원장은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과거·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그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 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르비아는 2000년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했으며, 그동안 수차례 경제 위기를 극복했고, 최근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돌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세르비아 경쟁당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 주도 정책'과 '수출 중심 정책' 조합으로 '한국의 기적'을 달성했다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며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재벌은 독점적 지위에 따라 문제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막강한 경제 권력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 종교, 언론, 이데올로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초기 자본을 제공했던 '오너 일가'의 보유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에 따른 공정위의 대응을 소개했다. 그는 "공정위 설립 초기에는 조직 규모도 작고 경험도 충분치 않아 법집행보다는 경쟁 주창 기능에 중점을 뒀다"며 "하지만 경쟁정책 필요성이 높아진 후 활동 방향은 경쟁법 집행으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